

농어촌 기본소득, 전남광주 인구·상권 활력 높인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전남광주지역에서 인구와 지역화폐 가맹점이 함께 늘면서 농촌 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시범지역 가운데 한 곳인 신안은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고 곡성은 지역화폐 가맹점이 20% 넘게 늘었는데 기본소득이 주민 유입과 지역 내 소비 기반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르면 올해 7월 신안 인구는 4만2387명으로, 시범사업 선정 직전인 3만8883명보다 3504명 늘었다.

증가율은 9.0%로 먼저 기본소득을 지급한 전국 10개 군 가운데 가장 높았다. 곡성도 사업 선정 직전 2만6694명에서 올해 7월 2만7663명으로 969명, 3.6% 증가했다.

양 지역을 합친 인구는 각 지역의 사업 선정 직전 총 6만5577명에서 올해 7월 7만50명으로 4473명(6.8%) 늘었다. 전국 10개 군 전체 인구 증가율인 5.0%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화폐 가맹점도 확대됐다. 곡성의

신안 주민 9%·곡성 가맹점 21.9% 증가…정책 실효성 ↑

구례·보성 포함 4곳 지급액 1068억원…사업 확대 요구

가맹점은 기본소득 지급 전월인 올해 1월 1069곳에서 7월 1303곳으로 234곳 증가했다. 증가율은 21.9%로 전국 10개 군 전체 증가율인 15.4%보다 높았다.

신안은 같은 기간 1151곳에서 1311곳으로 160곳(13.9%) 늘었다. 양 지역의 가맹점은 총 2220곳에서 2614곳으로 394곳(17.7%) 증가했다.

주민 수 증가와 함께 지역화폐 사용처

가 넓어진 것은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을 겪는 농어촌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기본소득을 지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면서 골목상권과 연계한 정책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먼저 사업을 시행한 10개 군 모두에서 인구가 늘었다. 이들 지역의 올해 7월 인구는 총 33만4904명으로

사업 선정 직전보다 1만5899명 증가했다. 지역화폐 가맹점은 올해 1월 1만4253곳에서 7월 1만6452곳으로 2199곳 늘었다. 이 가운데 신규 창업 점포는 659곳으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지역에서는 곡성과 신안에 이어 추가 선정된 구례와 보성에서도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지역별 지급인원과 누적 지급액은 신안 3만6881명·572억원, 곡성 2만4414명·289억원, 보성 3만1114명·124억원, 구례 2만634명·83억원이었다. 4개 군을 합친 지급 인원은 11만3043명이며 누적 지급액은 1068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초기 변화를 지속적인 지역경제 회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유입 주민의 정착과 소비 유발 효과를 분석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신규 창업에 뒷받침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며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증가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소비 유발 효과,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공정위, 가격 담합 심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 사무처는 7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제재 의견 등을 담은 자료다. 최종적인 벌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판매가격과 관련한 임금가, 확정가, 판매정책 등의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2026년 3월 이후에는 판매가격인 임금가를 담합한 것으로 심사관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 1000억원으로, 하루 평균 약 300억원 규모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정보교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방어진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 심의를 열어 벌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윤용성 기자 yj404@gwangnam.co.kr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 여수공장에서 광주·목포지역 제조업 및 조선업 자율안전협의체 회원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 벤치마킹 활동을 실시했다.

광주·목포 제조·조선업, 안전관리 사례 공유

우수 사업장 벤치마킹…VR 체험·협력업체 관리방안 살펴

광주·목포지역 제조업과 조선업 사업장들이 GS칼텍스 여수공장의 안전관리 사례를 공유하며 산업현장 사고 예방 역량 강화에 나섰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 여수공장에서 광주·목포지역 제조업 및 조선업 자율안전협의체 회원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 벤치마킹 활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현장 안전기법을 직접 살펴보고 지역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GS칼텍스 여수공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협력업체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안전시설과 작업현장을 둘러봤다.

또 가상현실(VR) 안전 체험을 통해 실제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사고 예방 대책을 살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도영 광주노동청장은 “안전은 우수한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현장에 적용해 나갈 때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이번에 경험한 안전관리 사례를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원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장은 “기업 간 우수 안전관리 사례와 경험을 나누는 계기가 돼 지역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함께 높이는 안전문화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남 농업용 드론 1004대…보험 사고 ‘최다’

드론 보급 확대에 사고도 급증…“안전교육 강화 필요”

전남지역 농업 현장에서 농업용 드론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보험 사고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인력난을 보완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업 등이 늘고 있지만 조작 미숙과 작업 부주의 등에 따른 기체 파손 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보급 확대에 맞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상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농업용 드론 보유 대수는 1004대로 전국 3555대의 28.2%를 차지했다.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농업용 드론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으로, 충남 879대와 전북 800대가 뒤를 이었다.

특히 전남·충남·전북 등 농업 규모가 큰 3개 지역의 농업용 드론 보유 대수는 2683대로全国的 75.5%에 달했다.

농업용 드론 보유 대수는 2021년 1661대에서 2022년 2098대, 2023년 2555대, 2024년 2910대, 2025년 3555대로 늘었다. 4년 사이 1894대 증가하면서 2021년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드론 보급 확대와 함께 사고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농기계종합보험의 농업용 드론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22년 151건에서 2023년 232건, 2024년 394건, 2025년 70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지급 건수는 2022년보다 552건 증가해 4.7배 수준으로 늘었다. 전년인 2024년과 비교해도 309건, 78.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의 지난해 농업용 드론 보험금 지급 사고는 23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국 전체 사고 703건 가운데 33.4%가 전남에서 발생한 셈이다.

전남은 농업용 드론 보유 규모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 사고에서도 전국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드론 활용 확대와 함께 안전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드론 사고 대부분이 작업 부주의와 조작 미숙 등에 따른 기체 파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업용 드론은 주로 논밭의 농약과 비료 살포 등에 활용되는 만큼 넓은 작업 면적을 비행하는 과정에서 바람 등 기상 여건이나 주변 장애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종자의 숙련도와 작업 전후 안전점검 등이 사고 예방에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또 농업용 드론은 농촌의 일손 부족을 줄이고 농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보급 속도에 비해 조종자의 숙련도와 안전교육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사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용성 기자 yj404@gwangnam.co.kr

영암군 공고 제2026-1007호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계획(안)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농지법」 제31조,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계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영 암 군 수

1. 계획의 개요

구 분	지정 계획(안)	해제 계획(안)
위 치	전남광주특별자치시 영암군 삼호읍 시로리 1353번지 일원	전남광주특별자치시 영암군 미암면 제지리 422번지 일원
특 례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 및 농업생산성 향상	학원변역·과다공로장 조성사업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규 모	888필지, 430.08ha	8필지, 6.177ha
관련근거	「농지법」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가. 기 간 : 2026.10.02. ~ 10.19. (의견서 제출은 10.19. 18:00까지)

나. 장 소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문. 3층)

다. 제출방법 :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서면 제출

라. 문 의 : 영암군 농업정책과 ☎061-470-2371

3. 관계도서 및 기타사항

가. 지정 및 해제 계획(안) 조사·도면 : 열람장소 비치

나. 본 계획(안)은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고문의

광남일보와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들어 가세요.

광남일보 신문 지면·홈페이지·온라인·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맞춤형으로 제작으로 효과적으로 홍보해드립니다.

대표번호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e-mail gnlibo3@daum.net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人

전남광주특별자치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구독문의 062-370-7080 / 팩스 062-370-7005

YouTube | **광남일보 iTV**

전남광주의 생생한 뉴스와 현장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광남일보 iTV와 함께하세요!

LATEST NEWS

전남광주 도로에 자율주행차 200대 뜬다…AI 청년 일자리도 열린다
시로 말소리 분석하고 주차까지 자동화…전남광주 청년창업이 달라졌다
취업·생계 불안에 무너지는 청년들…전남광주 30대 자살률 급등

대표문의 : 062)370-7070